

'95

여성계

광복 50년이라고는 하지만 분단 반세기를 넘겨야 하는 국민의 심경은 착잡하기만 하다. 더우기 한해의 마지막을 수의입은 전직대통령의 모습을 보며 보내야 하기에 비감하기조차 하다. 그러나 95년을 보내는 여성계는 다행히 풍성한 성과를 남겼다. 제4차 북경세계여성회의는 그 자체로 세계여성의 오늘과 내일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였으며, 여성사회참여 10대과제와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은 여성의 진전을 위한 기초를 닦는 계기였다. 특히 6.27 지자체 선거는 여성의 정치참여 원년이라는 평가가 내려질 만큼 알찬 수확을 남겼고, '남녀고용평등의 달'이나 공공부문 인센티브제 도입, 남녀고용평등추진본부 발족,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등은 여성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고용평등을 요구해 왔던 여성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의 결과다. 정신대문제가 국제적 인권문제로 부각된 점도 의미있게 평가됐다.

그러나 95년은 성과 못지않게 약제도 많았다. 지난해 '3천만원 위자료 배상판결'로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성희롱사건 항소심은 원심을 깨고 패소해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남성중심적 시각을 드러냈고, 경기도 여자기술원 화재사고나 또다시 한시법이 되고만 동성동본 금혼법도 여성들을 안타깝게 한 사건이었다. 본지는 이러한 활동을 중심으로 올해 여성계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 주)

1 제4차 북경세계여성회의의 개막 베이징선언과 3백62개항 행동강령 채택 한국NGO, 세계여성과 연대 계기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라'를 내걸고 북경에서 개막된 세계여성회의는 그 자체로 '여성해방' 구였다.

나이로비회의 이후 10년만에 북경에서 열린 세계여성회의를 끝내고 한국정부와 여성NGO들이 내린 결론은 '성공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여성바람이 분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개도국의 일원으로 G77그룹과 함께 베이징선언과 3백62개항에 이르는 행동강령안을 채택했고, 연이어 여성고용할당제와 여성인력확대방안 10대 과제를 내놓고 있다. '평화·발전·평등'을 주제로 다양하게 열린 워크샵에 참가했던 여성NGO들도 포럼장에서 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성폭력, 성희롱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해결방안을 촉구해 세계여성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냈다. 세계의 여성이슈는 '건강하고 완벽한 조건의 여성들이 이끄는 흐름에 주인으로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던 여성장애인, '레즈비언의 인권은 곧 여성의 인권이며 삶의 다양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레즈비언, '여자로 태어난 것이 죄가 아니다'는 구호를 내걸고 활발한 워크샵을 벌였던 여자어린이들, '여성을 위해 일하고 있는 여성'으로 부각된 해외 이주 가정부들의 합성 속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다양하고 구체적인 각론으로 번져가고 있다. 한국여성NGO들은 냉전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세계유일의 분단국의 여성으로서 임무를 찾아 나가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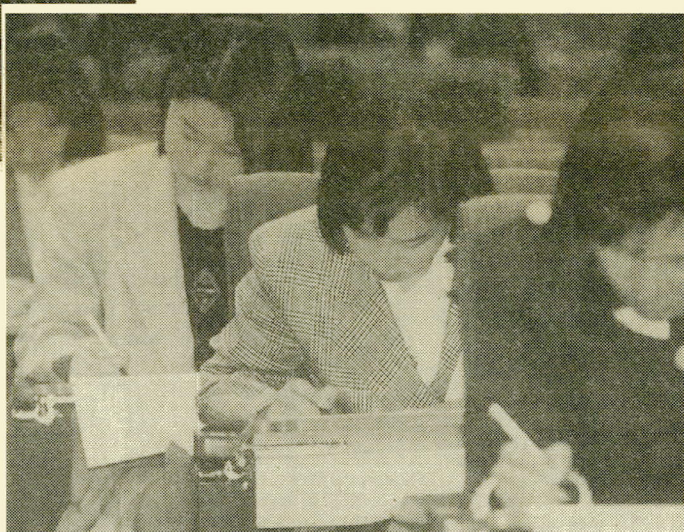
2 6.27선거서 여성 1백27명 당선 '여성이 여성 안 찍는다' 통설 깨



6.27지자체 선거는 여성이 여성을 안뽑는다는 통설을 깨고 여성후보들을 대거 당선시켰다.

'여자가 여자를 안찍는다'는 통설이 6.27 지자체선거 이후 변화하고 있다. 여성정치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 판단도 단순히 보상심리만이 아닌 환경, 문화, 교육 등 지방살림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여성만큼 책임자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평가됐다. 6.27선거를 통해 지방자치 일꾼으로 뽑힌 여성정치인은 단체장으로 유일하게 입성한 전채희 광명시장을 비롯, 광역의원 13명, 광역비례대표직 42명, 기초의원 71명 등 총 1백27명이었다. 이는 전체 당선자 대비 2.2%에 지나지 않는 숫자지만 91년 1기 지방의회에 비해 광역의원은 47명이나 늘었으며, 기초의원도 31명이 늘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수 정예부대를 선정, 당선을 목표로 최대 지원한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등 여성단체의 선거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애초 할당의식에 크게 못미친 것이나, 광역의원 비례대표직이 전체 여성의원의 수를 늘리는 데는 기여했지만 오히려 출마를 준비하는 여성들의 의지를 꺾는 요소로 작용했다는 점, 여성지도자를 키우는 구조의 취약성 등은 6.27선거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3 '여성사회참여 10대 과제' 발표 장애해소책부터 인력양성 위한 투자까지



세추위가 골격을 마련한 여성사회참여 10대과제는 이례적으로 여성계에서조차 '획기적'이라는 후한 점수를 받았다.

'단지 여성의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안됐다는 불만을 사기도 했지만 세계화추진위원회가 골격을 잡은 '여성사회참여 10대 과제'는 이례적으로 여성계에서조차 획기적인 여성정책이라는 후한 점수를 받았다. 중단기 과제로 채택된 10대 과제는 보육시설의 확충 및 내실화, 방과 후 아동지도, 학교급식의 전면적 실시, 여성의 공직참여 촉진방안 도입, 공기업 여성고용인센티브제 도입,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분담체계 확립, 여성인력 양성체계 확충 및 개선, 여성관련 정보네트워크체계 구축,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대중매체를 통한 성차별의식 개선 등. 가사와 육아에 대한 사회적 분담체계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토대가 되는 장애해소정책에서부터 여성인력 기피요인의 최소화,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직접투자와 제도적 보완장치 등에 이르기까지 여성문제의 핵심사항 대부분을 포괄한 최초의 여성정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예산과 정책 집행력을 가진 '여성부' 신설이 백지화되고 공기업 할당제 조치가 인센티브제로 조정되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세추위 여성위원들은 관료제와의 싸움을 승리로 이끈 공신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4 광복 50주년 맞아 행사 다양 여성주간, 여성연구 등 눈길 여성 50년 좌표 제시 못해 아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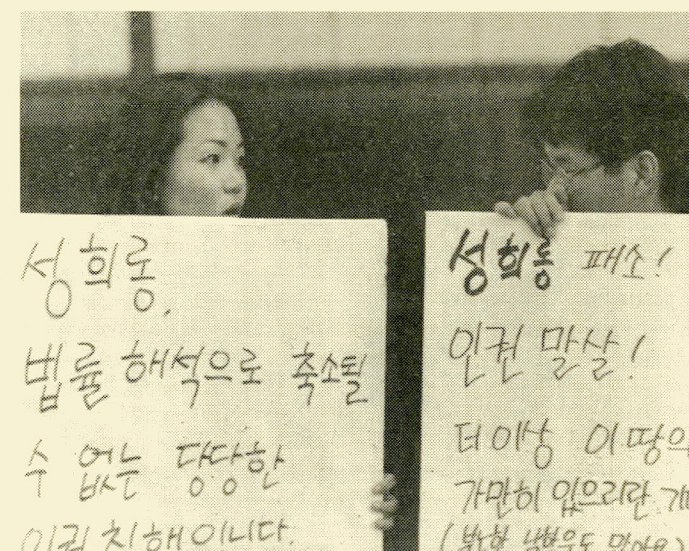
여성계도 광복 50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다채롭게 준비한 한 해였다. 7월에는 정무장관실(제2)이 주최하는 '광복 50주년 여성주간'이 마련돼 '유엔과 한국여성 50년'을 정리하는 심포지움과 범여성 전국대회가 열렸고, 한국여성학회도 '광복 50주년



7월에는 정무장관실(제2) 주최하는 '광복 50주년 여성주간'과 범여성전국대회 등이 열렸다.

기념 여성연구 발표회'를 통해 분단 50년을 살아온 여성들의 삶을 정리했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사진으로 본 한국여성 50년'을, 기독교민회는 통일마라톤 등을 가지기도 했다. 광복 50주년을 기념하는 대학여성연구소의 주제별 연구 또한 빠뜨릴 수 없는 활동으로 이대 한국여성연구소의 '한민족 여성의 한국 문화관과 통일의식' 세미나, 명지대 여성연구소의 '한민족여성 학술대회' 등이 진행됐다. 그러나 여성의 입장에서 진정한 의미의 광복 50주년 정리하고 연구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5 우조교 성희롱사건 항소심 패소 여성계, '법원이 여성을 희롱한 사건' 시민연대 구성해 상고 준비중



사법부의 시제는 거꾸로 도는가.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 항소심 패소 이후 여성계는 강력한 항의시위를 전개했다.

1995년 7월 25일,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 항소심 패소. 이 소식을 접한 여성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부정' '언어도단' '인간성 상실의 부실공사' '법원이 여성을 희롱한 사건' '합법적인 성도둑'이라며 재판부의 판결에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의 사법부는 또한번 이땅의 여성들이 부르짖는 진실을 외면하고 94년 4월 1심 재판부가 판결한 '3천만원 위자료 배상 판결'을 취소, 원고인 우조교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만 것이다. 이유는 '피고인 교수가 수차례에 걸쳐 신체접촉을 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악의가 없었고, 경미한 행위였으며, 원고 우조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바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조교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을 물어 총장과 국가에 청구한 사용주의 책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불법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여성계는 판결 이후 즉각 상고장을 접수시켰고, 항의시위와 재판부 해임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시민단체까지 포괄하는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 시민연대'로 확대하는 등 사법부의 경직된 법해석에 대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천명했다.

문 선정

10대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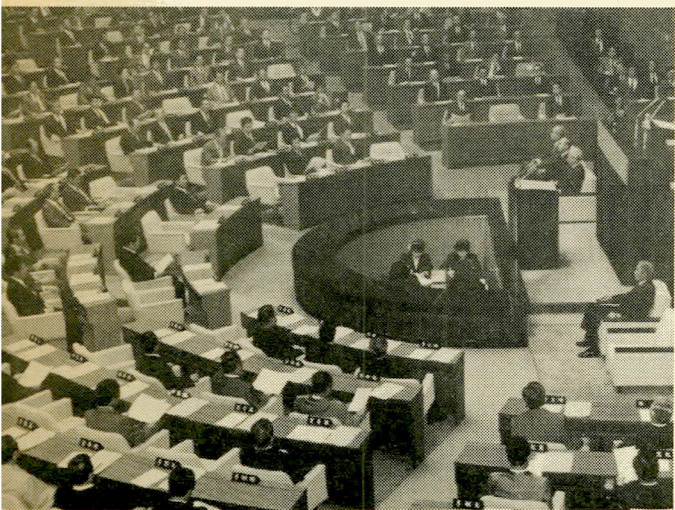
6 고용평등의 달 제정

고용평등추진본부 발족 등 고용평등 기반 다져
고평법 개정안은 간접차별 배제

노동부와 정부장관실(제2)이 매년 10월을 '고용평등의 달'로 정하고 고용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여성인력 양성방안 등을 사회적 책임으로 부각시키는 역할을 했다.

유난히 고용평등과 관련한 담론이 무성했던 한해였다. 이에 따른 다양한 실천방법과 제도적 보완작업도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남녀고용평등의 달 제정. 노동부와 정부장관실(제2)이 매년 10월을 '고용평등의 달'로 정하고 고용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여성인력 양성방안 등을 사회적 책임으로 부각시키는 역할을 했다. 할당제 논의가 광범위하게 조성된 것도 큰 성과. 고용할당제와 관련해서 총무처는 96년부터 공공부문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는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온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해서도 7월 손질이 가해졌다. 개정안에 따라 신체조건을 제시하는 기업들은 제재를 받게 되고, 남성육아휴직이 명문화되었지만 여성들의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직장내 성폭력, 임시직 채용 등의 간접차별은 포함되지 않았다. 10월 출범한 고용평등추진본부는 고용현장 불평등을 여성들이 직접 나서 감시하겠다는 강력한 선언으로 평가됐다.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고용보험제는 70%가 넘는 기혼 취업여성이 4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보장의 의미를 무색케 한 비현실적인 제도로 지적받았다.

7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제6장36조부칙3항으로 구성
정부 여당 '독주' 여성계 비난 듣기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여성단체를 배제하는 등 독단성과 졸속성으로 여성계의 비난을 받았다.

헌법상의 남녀평등이념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여성발전기본법이 행정위소위원회를 거쳐 마침내 12월 19일 정기국회 마지막날 전격 통과됐다. 여성사회참여 10대 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돼 왔던 여성발전기본법의 골격은 제6장36조부칙3항으로 이루어졌다. 기본법은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참여, 공직참여, 채용평등, 모성보호의 강화,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여성복지 증진, 영유아보호,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가사노동가치의 평가, 여성국제협력, 대중매체의 성차별개선 등의 여성정책 기본시책을 담았다. 그러나 기본법은 주체가 모호하다는 점, 여성단체에 대한 행정지원이 자칫 관변단체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를 안고 출발하게 돼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여성단체를 배제하는 등 법안제출과정에서 보인 독단성과 졸속성으로 여성계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8 경기도여자기술원 화재사고

잘못된 제도가 짓밟은 요보호 여성들의 인권
지역 민간단체와의 연계 필요성 대두

포주와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늘리려는 기술원의 결탁, 감시의무를 소홀히 한 정부의 직무유기는 결국 채 피지도 못하고 시커멓게 타버린 16구의 육신으로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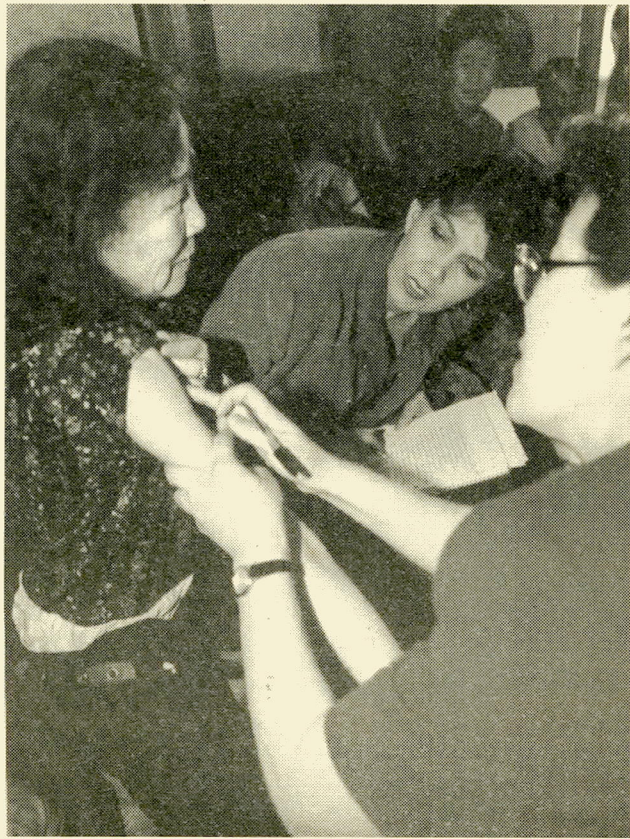
매춘여성에게 인권이란 있는가.

'시설의 장은 요보호자를 선도, 보호함에 있어 이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3장 13조 3항은 지난 8월 발생한 경기도여자기술원 화재사고에서 그 허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물론 여러차례 존폐논쟁이 터져나올 만큼 기술원의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운영은 인재를 예고해 왔지만 포주와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늘리려는 기술원의 결탁, 감시의무를 소홀히 한 정부의 직무유기는 결국 채 피지도 못하고 시커멓게 타버린 16구의 육신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더 끔찍한 사실은 벌써 기술원화재사고가 남긴 교훈을 잊어버리고 화재기술원 폐쇄라는 미봉책 밖에 내놓지 못하는 정부의 안일함이다. 이에 반해 시민단체들은 모든 시설을 폐쇄하는 한편 매춘여성에 대한 선도는 매매춘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면서 이를 감시,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 정신대문제 국제적으로 부각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방한해 조사
민간위로금안 추진 저지 성과

국가배상을 거부하는 일본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한 '민간위로금안'은 다행히 유보되었지만 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결국 50년을 넘기고 말았다. 외교상 난제라는 이유로 정부의 해결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민간단체들은 정신대문제를 '전시중에 일어난 성노예문제'로 규정하고 시효부적용을 주장하며, 진상규명과 국가배상을 촉구했다. 이들의 해결의지는 어느때보다 의미있는 성과를 남겼고, 정신대문제를 국제적으로 부각시키는데도 성공했다. 2월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주최한 아시아연대회의는 아시아피해국들이 한목소리로 정신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자리였고, 북경세계여성회의는 전세계 여성들에게 정신대문제의 실상을 알리는 자리가 됐다.



북경세계여성회의는 전세계 여성들에게 정신대문제의 실상을 알리는 자리가 됐고 5월과 7월에는 연이어 유엔인권소위원회 전문위원 린다 차베즈와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가 방한해 조사활동을 펼쳤다.

다. 5월과 7월에는 연이어 유엔인권소위원회 전문위원 린다 차베즈와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가 방한해 조사활동을 펼쳤다. 지난 12월 초 정신대 할머니들이 생활할 보금자리 '나눔의 집'이 완공돼 그나마 할머니들에게 위안이 되고 있지만 사라지는 역사의 증인들인 이들의 한은 언제 나 풀릴 것인가.

10 또 한시법된 동성동본 금혼법

내년 1년 혼인신고 허용
위헌여부 심판제청 현재 계류중

여성계가 지속적으로 폐지를 주장해 온 동성동본 금혼법이 또다시 내년 1년만 혼인신고를 허용하는 특례법의 형태로 통과됐다.

여성계가 지속적으로 폐지를 주장해 온 동성동본 금혼법이 또다시 내년 1년만 혼인신고를 허용하는 특례법의 형태로 통과됐다. 지난 11월 국회는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이면서도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해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막대한 지장과 고통을 받고 있는 동성동본 부부들에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혼인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이우정 위원장 등 8명의 의원들이 10월 발의해 제출된 이 법안은 동성동본 부부를 구제하기 위해 한해동안만 혼인신고를 받는 한시법이다. 한편 혼인특례법은 78년과 88년에 이어 세번째로 나온 것이며, 지난 5월 동성동본 당사자들은 서울가정법원에 동성동본 위헌여부 심판제청을 청구,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